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음 윤5월 24일)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프랜차이즈 갑질 솜방망이 처벌이 주범

3년간 공정위 검찰 고발 조치 '갑질' 사건 0건 "처벌 수위 더욱 높여야" 지적 목소리 커져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한 가맹본부 갑질 사건이 10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인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 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2건), 시정명령(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없었다

또 2012~2016년까지 처리된 가맹사 업법 위반사건 1415건 중 고발 처분은 2012년, 2013년에 각각 한 건씩 총 2건 이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도 2013년 1 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1 건 등 총 7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3885건 중 고발 57건(1.47%), 과징금 111건 (2.9%)을 처분한 점에 비춰보면 가맹 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징금 제 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대다수 법 위반행위가 상대적 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 위 측의 설명이다.

또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적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고발 처분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지난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주민들이 지난 4월 청원한 후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공장과 연

익산시는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 후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석달만이다.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관성을 조사하게 된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결정

가맹시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 4개 행위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 1849호

문제는 너무 가벼운 처벌로 가맹본 부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최근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 절반인 20%만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은 교존치킨 본사인 교존F&B의 경우 지난 2014년에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수익률 과장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맹본부의 '갑 질' 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나타 냈다.

특히 미스터피자의 '갑질 시건' 으로 불거진 대형 프랜차이즈 업주의 불공 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 로는 검찰 공정거래 전담부서의 증설 을 제시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도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정화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대대적 개혁작업을 추진하기로 했 다. /안재용 기자

3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추

가자료 제출과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의 이 같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영향성을 파악

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는 환경 · 건강자료 조사와 노출

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순

시는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환경오

염도 조사와 건강영향 등을 포함한 건

강영향조사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

/익산=장양원 기자

결정을 이끌어 냈다.

으로 진행된다.

침이다.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4일 전북 전 주지법 2호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김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형

700만원… 직위는 유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을 우려해 이 사건 지시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국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교육부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 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 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 속 기소됐다.

/김민근기자

'모두가 태권도로 하나되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막식 개최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 단,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 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세계태권 도문화엑스포(13일부터 18일까 지)개막식이 지난 15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와 무주군

황정수 군수,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정동영, 김광수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세계태 권도문화엑스포 최동열 조직위원 장과 유병용 태권도 원로를 비롯 한 전북지역 태권도 원로들, 태 권도진흥재단 김종헌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찾은 2천 9백 여 명의 선수단과 사범, 심판 등 태권도 관계자들과 무주 군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3일부터 무주에 들어와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14일부터 합동 훈련과 태권도 세미나, 태권도 체험에 참여하며 실력을 연미했 으며, 국제오픈태권도경연대회 (시범, 품새, 겨루기)를 통해 기 량을 뽐냈다.

15일과 16일에는 국제오픈생활 무용대회와 국제오픈줄넘기대회, 국제오픈장기자랑대회가 열려 엑 스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 며 매일 밤 한 여름 밤의 콘서트 가 개최돼 호응을 얻었다.

폐막식(오후 7시부터~)이 열리는 17일에는 무주군의 반다랜드와 머투와인동굴을 비롯해 전주한옥마을 등 도내 주요 관광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만금 개발 '골든타임 잡아라'

진홍 정무부지사, 사업현장서 "사업 예산 증액ㆍ반영돼야"

전북도 진흥 정무부지사는 지난 14일 새만금산업단지, 동서도로공사현장, 고군산연결도로, 농업용지 매립공사현장 등 새만금 현장을 찾아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새만금개발청 현장 관리본부 등)을 방문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새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는 기회를 십분 활용 하여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 속도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릴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새민금사업은 새 정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새만금은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공공주도 매립전환, 신항만과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내에 확충,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새만금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진흥 정무부지사는 "새 정부가 새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사업의 문제는 속도라고 밝혔 듯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선도매립,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인프라 조기확충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서는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간소화, 국가예산반영, 2023 잼버리 유치지원 등"이 필요하며,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사업 예산이 5천억원가량 증액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이원택 대외협력국장, 청와대로

이원택 전북 도 대외협력국 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14일 전 북도 등에 따 르면 이원택



국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됐다.

이에 이 국장은 오는 17일부터 청 와대로 출근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까지 공식발령은 나지 않아 당분간 은 파견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 다. /김진성 기자

